

직업훈련사업 평가의 의의

강 순 희*

직업훈련의 이익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통상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되는 데,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으로는 거시적 차원(macro)에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성과제고, 중범위 수준(meso)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와 기업의 성과제고, 그리고 미시적 수준(micro)에서는 개인의 취업 및 소득향상, 직업적 지위 및 경력개발에서의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익으로는 거시적 수준에서 범죄의 감소, 사회적 통합, 국민의 건강성 제고, 세대간 사회적 부의 이전 등에의 기여, 중범위 수준에서 취약계층 통합,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동기충족, 삶의 만족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의 이익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이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실제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숙련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책으로서 직업훈련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수요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인력 사이의 질적인 미스매치의 심화와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공존하는 이른바 숙련의 미스매치(Skill Mismatch)의 문제, 신성장 동력산업 등 전략분야의 인력부족(Skill Shortage) 문제 대응책으로서 직업훈련이 강조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그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또는 지자체마다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면서 그 때마다 직업훈련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재정을 통한 직업훈련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필요하다 할 경우에도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입에 대비하여 그 성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재정지원이 생산성 증가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의 악화, 고용창출의 한계, 재정건전성 악화 등 이른바 재정정책의 삼각딜레마(trilemma)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 그간 정책평가에서 일정하게 우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kang@kli.re.kr).

적인 평가를 받아온 직업훈련에 대하여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투입의 적절성, 효율성과 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냉정하게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원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처음으로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사업은 그간 급속히 확대되어온 직업훈련의 각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재정투자 수준은 적절한지, 또한 각 사업 분야별로 자원배분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대상, 자원, 방법 등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식별하고 분류한 후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분석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지원 직업훈련을 둘러싼 주·객관적 환경은 전에 없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정책도 냉정한 평가를 거쳐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현재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평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영하여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본다는 정책평가의 의의를 살려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KL**